■ 미국산 쇠고기 파동 ② 왜곡된 유통구조

‘광우병 발병 시 수입 중단’ 합의문에 없어

■ 한국 정부 美 쇠고기 대책 어떤 문제 있나

정부와 여당이 최근 미국산 쇠고기 비난 여론에 밀려 내놓은 이 같은 검역 보완책들은 대부분 지난달 18일 타결된 합의문에는 없거나 상충하는 것들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다면…’ 등의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실제 상황이 발생해 우리 정부가 실천에 나설 경우 미국과의 통상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들이기 때문이다.

◇미국 광우병 발생 시 수입 중단= 정운천 농수산식품부 장관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다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시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합의문 4, 5조는 ‘미국에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추가 발생으로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 광우병 지위 분류에 부정적 변경을 인정할 때에 한국정부는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것’이라고 분명히 수입 중단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한 마디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했다는 이유만으로 한국 정부가 곧장 쇠고기 수입을 막을 수는 없고, OIE가 현재 ‘광우병위험통제국’인 미국의 광우병 위험 관련 지위를 낮출 경우에만 수입을 중지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8일 수입 중단과 관련, “국제법(GATT)은 국내법과 동등하게 발효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으나 실제로 광우병 사태가 터져 한국이 대국민 약속대로 수입을 중단할 경우 미국측은 즉각 위생조건을 주장하며 협의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광우병 발생 시 전수 검사= 이 부분은 수입 중단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실행에 큰 문제가 없다. 두 나라가 맺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수입 가능한 부위·연령, 수출작업장 지정 권한 및 절차, 광우병위험물질(SRM) 발견시 작업장 규제조치 등을 담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수입국이 어떤 방법, 어떤 수준의 검역을 통해 조건 위반 사실을 찾아낼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SRM 연령표시 없으면 반송=당정은 앞으로 들어오는 미국산 쇠고기 가운데 광우병위험물질(SRM)의 경우 월령 확인이 불가능하면 모두 검역 불합격 판정과 함께 돌려보내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는 수입위생조건을 우리 측이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한 케이스다.

이번 합의문 22조에 따르면 미국 수의당국이 발행하는 수출검역증에는 연령표시 항목이 의무 사항에서 빠졌다. 다만, 부칙에서 T-본 및 포터하우스 스테이크의 경우 양국이 고시 발효 후 180일까지는 월령을 표시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미국은 180일 이후 수출검역증명서에 SRM을 포함해 어떤 경우라도 월령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모든 월령 소의 편도·회장원위부(소장 끝), 30개월 이상 소의 뇌·눈·척수·머리뼈·등뼈’로 규정된 SRM을 수입하지 않는다는 위생조건을 근거로, 어떤 SRM의 연령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금수 품목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검역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쇠고기 수입 반대 비상시국회의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특별대책위’와 농민회 광주·전남연맹 등 광주·전남지역 190여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8일 오후 광주시 동구 광주 YMCA 무진관에서 ‘비상시국회의’를 갖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철회를 주장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관련기사 7면〉 /고경석기자 ksgo@kwangju.co.kr

美 광우병 발생 시 전수 검사는 할 수 있을 듯

위험물질 월령표시 항목 해석 달라 논란 여지

현물 검사 1% 불과 광우병 못 걸러낸다

수입산 정육으로 유통돼 국내산과 식별 못해

장비 없고 인력도 태부족 … 단속 기대 불가능

미국산 수입쇠고기가 식탁에 오르기까지 왜곡된 유통과정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안전성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입쇠고기의 유통은 민간수입업체→중간유통업체→소매업체→소비자, 대형할인점→소비자 등 두 갈래의 경로를 거친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수입 위생조건고시를 13일 완료하고 15일 공포할 경우 지난해부터 부산항에 대기중인 5천300t과 미국 롱비치항에 묶여있던 7천t 등 1만2천여t의 미국산 쇠고기가 이달 말께 시중에 유통된다.

그러나 검역과정에서의 허점과 함께 유통과정에서 미국산이 한우나 호주산으로 둔갑하거나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은 채 소매점과 소비자에 도달하는 사례가 많아 ‘광우병 파동’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우려가 높다.

정부는 검역과정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검출되거나 허용기준치 이상의 잔류물질이 검출되는 등 중대한 위반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쇠고기를 실은 냉동 컨테이너가 들어오면 포장을 뜯고 육안으로 검사하는 현물검사 비율이 1%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전수검사가 아니라 1% 검사만으로는 광우병 판정 여부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일본은 최근 미국산 쇠고기에서 등뼈가 확인되자, 수입을 중단하고 미국산 쇠고기 검역 표본조사율을 1%에서 10%로 높이는 등 검역을 강화한 바 있다.

소비자들은 또 왜곡된 시중 유통과정에도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수입산의 경우 지육(도축 직후 뼈와 고깃덩어리가 함께 있는 상태)이 아니라 정육(뼈를 발라내고 고기를 부위별로 나눈 상태)으로 시중에 유통돼 국내산과 구별하기가 어렵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미국산은 경매를 통해 중간유통업체에 도달할 때까지 부위별로 박스에 넣어져 원산지가 표시돼 있으나 정육점·음식점 등은 박스가 아닌 소포장 단위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이 단계에서 한우나 호주산으로 둔갑할 수 있다”며 “특히 지난해부터 대형 할인마트의 미국산 판매가 부진, 정육점·음식점 등으로 유통경로를 바꾸는 사례가 늘어 원산지 둔갑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해 1~8월 전국 1천301개소의 소매업체를 단속한 결과 허위표시업체가 10.1%에 달했다.

설상가상, 최종 소비단계인 정육점이나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단속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샘플을 채취해 유전자(DNA) 검식을 통해 국산과 수입산을 식별할 수 있는 전문장비가 턱없이 부족한데다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42명의 단속반이 4만2천여곳을 담당할 수밖에 없어 제대로된 단속은 기대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유통과정의 맹점과 ‘광우병 괴담’으로 인해 한우 쇠고기와 한우값이 폭락하고 판매량이 급감하는 등 때아닌 피해를 입고 있다.

광주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단속 인력과 횟수를 대폭 늘리고, 현재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 ‘솜방망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27%대에 불과한 송아지 이력추적제를 전 한우에 적용하고 미국산의 시중유통을 원천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재협상 안되면 한·미협상 파기하라”

국회 정치·통일·외교·안보 대정부 질문

국회는 8일 국회의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갖고 미국 쇠고기 전면 개방, 변화된 대북 정책 기조, 청와대 인사 시스템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쇠고기 협상=민주당 장영달 의원은 “국민의 생명권을 포기한 정부가 어찌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겠느냐. 이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인지, 미 합중국 정부인지 많은 국민이 의아해 하고 있다”며 “원점에서 재협상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고, 정부가 무책임한 밀실 굴욕협상을 하지 못하도록 ‘통상절차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목희 의원은 “이번 협상은 미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미국의 정치적 압박에 굴복해 국민의 건강,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했다는 것이 압도적 다수 국민의 인식”이라며 “재협상을 요구하되, 안되면 한·미 간의 합의를 파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반면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이미 보도된 일본 과학자의 말에 의하면 광우병으로 죽을 가능성은 떡을 먹다가 목이 막혀 죽을 가능성의 4만분의 1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며 “미국에 광우병이 나타나거나 더 좋은 조건으로 쇠고기 협상을 하는 나라가 있다면 우리도 재협상을 요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대북정책=민주당은 경색 기미를 보이는 남북관계가 새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6·15 정상회담 합의 수용 등 방향전환을 촉구했다.

◇국정·인사 시스템 혼란=야당 의원들은 쇠고기 파동에서 드러난 국정 난맥상과 재산공개 과정에서 의혹이 불거진 내각 및 청와대 수석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청와대 및 내각의 전면 쇄신 필요성을 거론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美 쇠고기 이르면 이달말 국내 유통

달라진 수입위생조건을 적용받은 미국산 쇠고기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중에 유통될 전망이다.

8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13일까지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에 대한 20일간의 입안 예고를 거쳐 곧바로 확정 고시 절차를 밟는다.

별 문제가 없을 경우 확정 고시 때까지 대략 보름 남짓 걸릴 것으로 예상돼 대략 이달 말께부터 개정된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 시장에 풀릴 것으로 보인다.

확정 고시에 앞서 각계가 제시한 의견을 검토하고 규제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종적인 심의를 한 뒤 개정된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하면 이 규정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과 통관이 재개된다.

이와 관련 농림부 동물방역팀 관계자는 “확정 고시 시기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요한 정책 결정 사인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곁들였다.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광범위한 반대 여론을 의식해 고시를 늦추거나 개정안을 수정해 다시 입안 예고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럴 경우 미국의 압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무한정 미루기도 힘든 상황이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늦어도 다음달에는 미국산 쇠고기가 본격적으로 국내 시장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